

전북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교육위, 행감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6건 의안심사 열고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3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개의 조례안과 오는 11월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6개 의안 중 5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용어정비를 이유로 수정가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위 위원들은 "대법원판결에 따른 조속한 도교육청의 대처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유기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6개 의안 중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3건을 포함한 것으로, 취득 5건과 취득 및 처분 18건이다.

여기에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고있는 가칭 '정읍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가칭 '고창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신축의 건이 포함됐다.

김희수 위원장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 개관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의안에는 오는 11월 실시될 2021년 행정사무감

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고, 채택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8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로 회부된 의안은 6건은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발의자 나인권 의원),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도교육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도교육감), ▲ 2022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발의자 도교육감), ▲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발의자 도교육감),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이다. /유호상기자



“사사오입 반대” 신북지전북포럼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선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구성 이후 회의 단 한차례... ‘조두순 출소’ 경기남부청 회의 전무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돼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빅데이터 분석 통한 도민 관심사 정리

도의회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제76호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1가을 제76호를 발간했다.

제76호에는 제383회 임시회와 제38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5분 자유발언과 현정의정활동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전북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구축방안 마련과 청년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개선, 농촌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기간 제·개정된 조례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결의문도 정리됐다.

도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수혜인인 조세감면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소식지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민들의 관심사도 정리됐다. /유호상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개 시·군과 관련한 기사를 분석한 결과 언론보도에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재난·지역경제활성화·청년·새만금·교통·귀촌·애항심·관광객·관광지 등이 자주 언급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오광근 간행물편집위원장은 “도민들이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76호 소식지는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onbuk.kr)에서도 볼 수 있다. /유호상기자

을지대국연습 27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오는 27~29일 서울간 2021년 을지대국연습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론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을지대국연습은 당초 5월 말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반기로 시행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청와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단,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는 제외한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기업 대상 관리 부실

수출입은행 국감서 '공정위 제재기업 지원' 사실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전북 익산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3일 열린 2021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 발굴 촉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세계시장에 선도를 중·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세계적인 ESG 강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재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홍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관계사 앞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에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서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232곳 중 9곳은 신청 가능한 매출액 기준(매출 400억원~1조원)을 상회하는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홍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금년 7월 ESG 관리 강화 기준을 도입해 육성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늦은 측면이 있다. 개선된 제도도 육성기업을 선정할 때는 2년 내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탈락시키는 반면, 이미 선정된 기업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신규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1조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성장해 히든챔피언 육성 필요성이 없어진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던 문제점이 밝혀졌다”면서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이 실질적 필요한 소규모 중소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힘 도당 청년위 “실현 가능 전북 공약 제시해야”

12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의 청년위원회가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 대한 논평을 냈다.

이날 김지현 국민의힘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대변인은 “전북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숙원사업들을 언급

하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이 실현 가능한 전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지만, 그에 비해 전북의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건강한 발

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당은 전북에 산적해있는 문제와 현안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북의 발전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획기적인 공약을 준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

이원택 의원 “서해안 특성연구 거점 연구소 건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은 1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해, 제주지역에는 해양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가 있으나, 서해지역의 해양특성을 연구할 거점 연구소가 없어, 기획연구를 통한 서해 거점연구소 건립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 서해지역을 홀대한다고 지적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해는 세계적인 갯벌과 다양한 해양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새만금의 수질변화, 방조제 배수갑문을 활용한 조력 발전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준 높은 연구로 서해의 가치를 향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12월까지 기획연구를 마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서해관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험사업 운영계획 수립,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거쳐서, 2023년부터 서해지역 시험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새만금광역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유호상 기자